

이재명, ‘노인 일자리 확충·K콘텐츠 생태계 조성’ 공감대

전북 익산시 ‘골목골목 경청투어’
노인 일자리 확충 필요성 언급

전주서 ‘K콘텐츠 산업 진흥 간담회’
산업영화 생태계 지원 등 경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가 7일 어버이날을 하루 앞두고 전북 지역의 어르신들을 만나 “우리 세대가 우리 어르신들을 잘 모시고, 또 다음 세대들도 희망이 있는 그런 세상 만들어야하는데 저희가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골목골목 경청투어 중 전북 익산을 찾아 대한노인회 익산지회 임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우리 어르신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시간에 소위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게 한, 옛날말로 하면 산업역군들이신데 지금은 또 노후가 매우 불안정해서 다들 걱정이 많으실 것 같다”며 노인 소득 빈곤 문제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주시면 당에서도 정책으로 잘 소화하고, 또 현장에 있



민심을 청취하는 ‘경청 투어’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7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풍남문 인근에서 어련이를 안아주고 있다. /뉴시스

는 좋은 제안을 잘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대한노인회 익산지회 임원이 전북 지역의 노인 일자리 문제를 지적하며 일자리 확충을 요청하자 “노인 복지도 많이 확대해야 하고, 기초연금도 부부가 받으면 깎고 70% 밖에 못 받으니까 각별히 신경써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에서 시행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 임금) 29만원인데, 전엔

20만원이었다”며 “노인 일자리를 늘리긴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전북 지역의 어르신들을 만난 뒤 전주국제영화제가 열리고 있는 전북 전주 한옥마을에서 ‘영화와 드라마, 정치가 그리는 미래의 스크린’ K-콘텐츠 산업 진흥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영화 ‘국제시장’ ‘해운대’의 윤제균 감독, ‘다음 소희’의 정주리 감독, 드라마 ‘시크릿 가든’ ‘미스터

선사인’ ‘더 글로리’의 김은숙 작가, 드라마 ‘나의 아저씨’ ‘나의 해방일지’의 박해영 작가가 참여했다.

이 후보는 “문화라고 하는 것을 문화적 측면에서 접근하지만, 저는 먹고 사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경제적으로 앞서 있지만, 문화적 측면에서도 전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특성은 문화와 사고의 깊이가 남다르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콘텐츠) 생태계를 조성해야 하는데 그것을 공룡이 막 밟고 있고, 풀밭이 무너지고 있다”며 “그것을 지키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본다, 일자리도 늘리고 문화인의 자부심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문화인들은 이 후보에게 침체된 산업 영화 생태계 지원책 마련,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의 시장 장악에 대응하기 위한 토종 OTT 육성 등을 요청했다.

골목골목 경청투어를 소화한 이 후보는 8일엔 ‘경제’를 키워드로 한 현장 행보에 집중한다. 이 후보는 8일 오전에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경제5단체장

간담회를 한다. 이 후보와 이한주 총괄 정책본부장, 진성준 정책본부장, 조승래 공보단장, 김원이 산자위 간사, 강준현 정무위 간사, 정태호 기재위 간사,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어 오후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직능본부 민생정책 협약식을 갖고 이소영 민주당 의원, 경제 유튜브비들과 함께 ‘경제 유튜브 연합 토크쇼’를 진행한다. 토크쇼에 참석하는 유튜브비들은 전인구경제연구소, 와이스트릿-이대호, 이효석아카데미, 채상욱의 부동산 심부름센터다.

이 후보는 9일에 3차 경청투어 ‘영남 신라벨트편’에 나선다. 이 후보는 이틀 간에 걸쳐 경북 경주·영천·칠곡·김천·성주·고령과 경남 창원·함안·의령·진주·사천·하동을 찾아 시민과 소통 행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박태홍·서예진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정년 60세’는 그대로, 권고문만 발표… 대선이슈로 부각

근로자 원할 시 고용 의무화 권고
공익위원 권고문, 강제력 없어
양당, 정년연장 vs 퇴직후 재고용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인구조조 변화 대응 계속 고용위원회’가 8일 정년연장 노·사·정 합의에 실패해 공익위원 권고문만 발표하는 가운데,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고용방식에 대한 논의가 6·3 조기 대선에 주요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7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경사노위 산하 ‘인구조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는 정년을 현행인 60세로 유지하고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까지 근로자가 원할 경우 고용을 의

무화하도록 하는 공익위원 권고문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공익위원 권고문은 강제력은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경사노위 대화 참여 중단을 선언한 한국노총은 내부 논의를 거쳐 대화 복귀를 결정했으나, 정년연장 및 계속고용 관련 논의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동계는 합의 없이 경사노위가 공익위원 권고문을 발표한다고 하자 유감을 표했다.

정년 연장 찬성 측은 저출생·고령화로 심각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활동 기간을 연장해 정년과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사이 소득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여긴다. 다만, 확실적인 정년 연장 반대 측은 한국의

연공서열형 임금체계에서 정년을 연장할 경우 기업에 큰 부담이 되고, 기존 근로자들의 근무 기간 연장으로 청년 일자리 감소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한다.

법적 정년 연장과 퇴직 후 재고용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입장도 첨예하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4월17일 정년 유연화와 계속고용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으며, 당의 노동위원장인 김위식 의원은 사업주에게 ‘계속고용 의무’를 부여하되, 구체적인 방식은 ‘정년 연장’과 ‘퇴직근로자 재고용’ 가운데 선택하도록 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정년을 연장할 경우 호봉급을 완화하는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하고, 재고용 시에는 종전과 근로시간과 임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해 노동경직성 완화에 초점을 뒀다.

민주당은 현행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법적 연장하고 정년 연장을 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당대 대선 후보가 당 대표 시절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년 연장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고, 당 내에서 정년연장 데스크포스(TF)를 조직해 노사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 입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이재명 후보는 지난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노동정책 발표문을 내놓고 정년 연장을 약속했다. 이어 “법적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사이의 단절은 생계의 절벽”이라며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려면 계속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법적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의 부담은 현실로 다가온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지난 1일 ‘고령인력 활용 확대를 위한 노동시장 과제’ 보고서에서 초고령사회 진입 등을 이유로 노동계와 정치권 중심의 법정 정년연장 요구가 확대되고 있으나, 지난 2013년 정년 60세 법제화가 고령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보다는 우리 노동시장의 부작용을 오히려 심화시킨 것으로 나타나 추가적인 법정 정년 연장은 지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태홍 기자

한덕수 “단일화 이뤄지지 않으면 본후보 등록 안 해”

국민의힘, 단일화 파열음 지속

국민의힘이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의 단일화를 통해 막판 컨벤션 효과를 노렸지만, 당 내홍(內訌)만 커지는 모양새다.

김 후보와 한 예비후보는 7일 저녁 단일화 논의를 위해 만났다. 한덕수 예비후보는 김문수 후보와 만나기 직전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선 본후보로 등록을 안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며 강경한 각오를 보였다.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 지도부는 전날(6일)까지 단일화를 두고 파열음을 냈다. 김 후보는 당 지도부가 후보를 교체하려 든다며 반발했고, 지도부는 단일화 일정이 급하다면서 김 후보를 압박했다. 결국 김 후보는 유세 일정을 돌

려 중단하고 서울로 향했고, 권성동 원내대표 등 중진 의원들은 김 후보 집 앞까지 찾아갔으나 만나지 못하고 돌아오는 촌극이 벌어졌다.

7일에도 국민의힘은 단일화 문제로 시끄러웠다. 당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했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안철수 의원, 한동훈 전 대표는 “이럴 거면 왜 경선을 했느냐”며 지도부를 성토했다.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전국위원회(8~9일 예정)와 전당대회(10~11일) 소집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하기도 했다. 이들은 당 지도부가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를 무리하게 소집해 김 후보의 지위를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덕수 예비후보 측은 김 후보가 ‘김덕수(김문수+한덕수)’ 캠페인을

통해 후보로 선출됐으며, 김 후보가 단일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압박했다. 한덕수 예비후보측이 단일화에 서두르는 이유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선거를 뛰어야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후보 등록 마감인 11일 전까지 단일화를 마무리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김문수 후보가 나가고, 한 예비후보는 무소속이 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한 예비후보는 ‘기호 2번’을 쓸 수 없다. 아울러 선거운동에 국민의힘의 자금을 쓸 수 없다.

이 때문인지 한 예비후보는 7일 회동 전 입장문을 통해 “단일화 절차, 국민의힘이 알아서 정하시면 된다. 저는 응하겠다”며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저는 대선 본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김 후보를 향해 사실상 배수의 진을 친 셈이다. /서예진 기자 syj@

민주당 “나머지 재판도 연기하는 것이 순리”

>> 1면 ‘이재명 파기환송심…’서 계속

다만, 대선 이후 재판이 재개되면서 공무담임권을 잃는 선고형량이 나올 경우가 문제다. 민주당은 이에 대비해 이날 대통령에 당선된 자는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에 받던 재판을 정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민주당은 이 후보의 다른 재판도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공직선거법 재판 외에도 여러 사건의 재판 기일이 잡혀 있다”며 “나머지 재판 역시 연기하는 것이 순리에 맞다”고 촉구했다.

이 후보는 공직선거법 재판을 포함해 대장동·위증교사 등 총 5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일부 재판의 공판은

선거 유세 기간 중에 잡혀 있어, 이 후보가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다. 앞서 대장동 사건을 맡은 중앙지법 재판부는 오는 13일과 27일을 기일로 지정했고, 위증교사 사건 2심은 오는 20일 첫 재판을 진행해 6월3일 재판을 마무리하는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에 이 후보의 변호인들은 이날 오후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와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에 각각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해달라는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대장동 재판을 진행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변호인단의 요청을 받아들여 공판기일을 대선 후인 6월 24일로 연기했다. /서예진 기자